

보도시점 2024. 1. 30.(화) 14:00
(2024. 1. 31.(수) 조간)

배포 2024. 1. 30.(화) 09:00

정부, 디지털 심화 쟁점 해결에 본격 돌입한다!

-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26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제1차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
- 국민 관심과 파급력 높은 8개 핵심쟁점은 집중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정부는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국민 관심과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 8개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30.(화) 오후 2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이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기재·교육·고용·법무 등 26개)가 함께 '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하였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23.10.30)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되었다.

<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개요 >

- **주요 내용** :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 쟁점 분석·진단, 대국민 인식조사
- **참여 기관**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조실
- **기간**(쟁점 분석·진단) : ‘23.11.1 ~ ‘23.12.29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참고2】)하였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하였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총 8개 과제(【참고3】)이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까지 ‘(가칭)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 누리집도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관계부처는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18.2%)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만 15세 이상 전국 일반 국민 2,200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조사 기간 : '23.11.16 ~ '23.12.13

한편, 과기정통부는 실태진단 결과를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를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해설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내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사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향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재외공관, 해외홍보문화원 등을 통해 글로벌 홍보·확산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전략팀	책임자	팀 장	이강용 (044-202-6169)
		담당자	사무관	나상민 (044-202-6142)
		담당자	사무관	양윤아 (044-202-6155)
		담당자	사무관	정성욱 (044-202-6156)
		담당자	사무관	김슬기 (044-202-6147)

참고1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계획

- ◆ 실태진단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고, '24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추진

□ 회의 개요

- (일시) '24.1.30(화) 14:00 ~ 15:00 (60분)
-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 (참석자) 과기정통부 장관(주제), 관계부처 1급,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정책관

· 관계부처 :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특허청,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조실 등

- (논의 안건) 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 보고
② '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사회자 / 과기정통부 장관
14:05~14:15	10'	· 생성형 AI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전망	베인앤드컴퍼니
14:15~14:25	10'	· 안건 발표 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5') ② '24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5')	정보통신정책관
14:25~14:58	33'	· 부처별 의견 및 추진방안 논의	각 부처
14:58~15:00	2'	·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보장



-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행정영역 디지털 대체수단 확보

-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 플랫폼 종사자 보호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재택근무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 대응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 디지털 환경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
-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하는 AI·데이터 활용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 취약계층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 유·초·중등 AI·디지털 교육 확대

-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 온라인 플랫폼·AI 시장의 공정성 확보
- 온라인 다크패턴 대응
-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통신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
- 디지털세 과세 방안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도 정비



- 데이터 자산의 보호 관련 제도 정비
- 생성형 AI 산출물의 법적지위 및 저작권 관련 제도 정비

-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상속여부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범 정립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상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

데이터 개방 촉진



-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 민간 데이터 공유·개방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 체계 개편

AI 안전·신뢰를 위한 기반 조성



- AI 편향 대응
-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규범 정립

- AI 제조물 책임 관련 제도 정비

분야별 AI 활용 기준·원칙 정립



-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기준 정립
- 금융 분야 AI 활용 기준 정립
- AI를 활용한 채용 관련 기준·원칙 정립
- 군사분야 책임있는 AI의 활용 방안

-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안전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도 정비
- 디지털·AI 의료기기 활용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

디지털 재난·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 디지털 재난 예방, 대응
- 사이버 위협 예방, 대응

-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확보

건강한 디지털 이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대응



- 사이버 공간에서의 차별·혐오 표현 대응
- 가짜뉴스 대응

- 디지털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보장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등 디지털 권리 보장
- 디지털 범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관리



- 민간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 갈등 조정

디지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 디지털 분야 저탄소 전환 촉진
-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형성
-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
←←←←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

- AI 알고리즘의 편향 방지, AI 제조물 책임 명확화 등 안전한 AI의 개발·활용에 관한 **적정 수준의 규범** 마련 필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 AI 기술 발전 및 활용분야 다변화, 이해당사자 간 참여한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문체부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안전성·효과성 및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 필요

복지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 생성형 AI 기술의 오남용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워터마크 표기 등 실질적·구체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방통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유연한 업무 환경**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의 삶과 업무가 분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논의 활발

고용부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의 사진·정보**에 대해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의 자유, 알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점 모색 필요

개인정보위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인프라**가 핵심 기반 시설로 기능하는 만큼 **재난·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과기정통부
국조실
여가부
방통위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 고령자,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이외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필요

과기정통부
행안부
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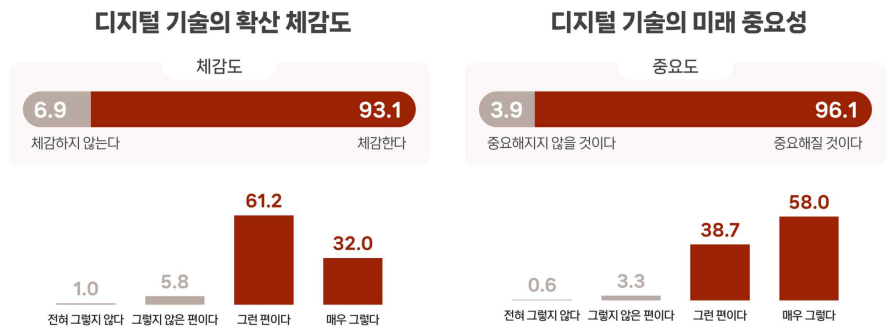
참고4

대국민 인식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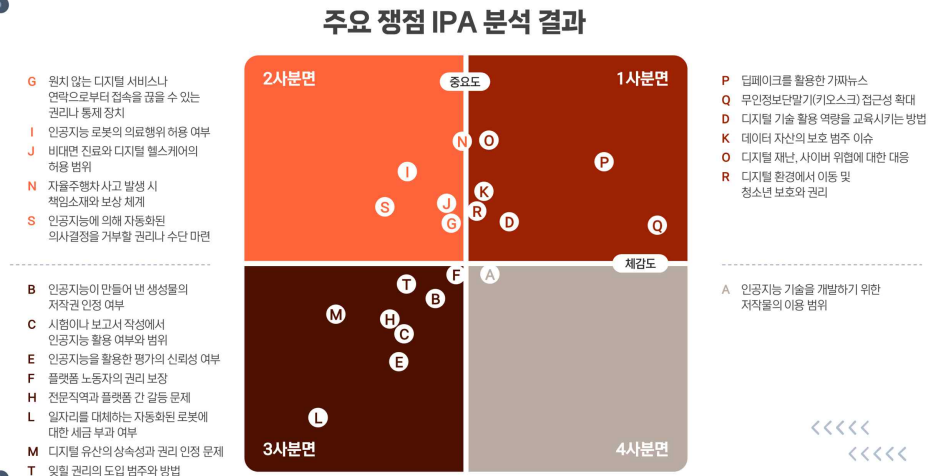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인지도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인식



디지털 심화 시대 쟁점 체감도/해결 중요도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 (복수응답)

